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4년 8월 1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 노동당 이백운 대표
- 정의당 나순자 사무총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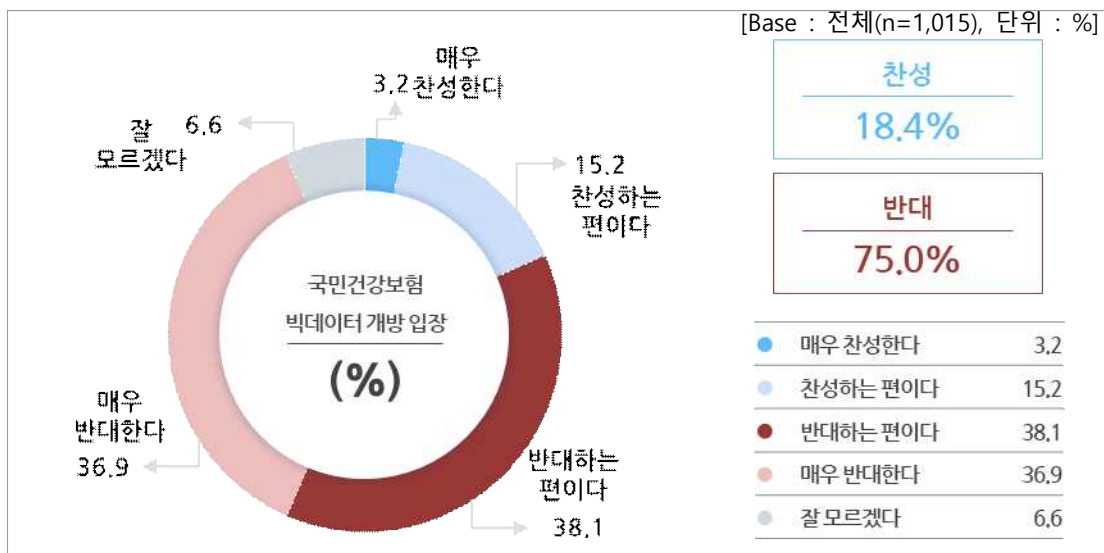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김흥수 공공  
운수노조 부위원장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 8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 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입니다. 즉, 모든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라고 발언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호하지 않고 단순히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금일 출범한 공동행동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3.1%p)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입장



5.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반대 이유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49.3%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서	11.4%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7.5%
기타(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해서, 모름/무응답 등)	0.4%

6. 2023년말 기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상황입니다. 이미 개별 보험사는 가입 고객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축적한 상황이며, 이를 이용해 사고위험 평가를 통한 보험료 산정, 언더라이팅,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리 등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추가된다면 민간보험사는 사실상 전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7. 민간보험사는 영리목적의 기업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게 하되, 보험금 지급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의 53.0%가 보험사 민원이고,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지급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또한 최근 수익구조가 악화된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의료 및 바이오산업 등의 진출과 빅데이터 판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헬스케어와 연계한 보험 상품이 판매 중에 있고, 금융데이터거래소에도 보험사 데이터가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까지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는 땅집고 헤엄치는 수준으로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8. 정부는 민간보험을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민간보험사를 더욱더 키우기 위한 지원정책임과 동시에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시작을 알리는 정책입니다.

9.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저지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위해 앞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 기자회견문 1부.

## <기자회견문>

#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나,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한 발언이다. 이 천박한 인식에 깊은 분노가 치민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로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보호할 대상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현실에 오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 모두는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요구해온 것은 한두해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중요성,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로 인식하고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천명했다. 단순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버젓이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고, 공보험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담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망라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린 것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자, 민간보험사 수익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단순한 의료정보가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다.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가 있으면 개인질병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특히 민간보험사는 내부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보험사는 이런 정보를 거래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병력이 있고 질병에 취약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근거로 쓰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또 의료민영화에 활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미국처럼 병원과 연계해 의료에 직접 진출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사에 넘겨졌을 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전국민건강보험 제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한 질문에 민간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해도 된다는 응답은 24.8%에 불과했다.

또한 공동행동이 지난 7월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75.0%가 반대한 반면, 제공에 찬성한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49.3%,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서’ 11.4%,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7.5%로 반대 이유도 명확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정부는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OECD최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민간보험사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공단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시장확대를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건강보험의 약화일 것이다.

오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에 참가하는 5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역시 공익적 목적이라는 허울뒤에 숨어 계속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법안을 개정하라!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는 존재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압박,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19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가난한이들의건강권 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히), 노점노동연대, 천주교빈민

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 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 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개별 공무원단체 ( 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금산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남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동두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봉화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안성시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여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예천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울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청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청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빈곤네트워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 철거민연합 ), 새물약사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여성장애인연대, ( 사 )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사 )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광주여성 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라센터, 나무를심는학교, 나주장애



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 노원중증장애인독립  
 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 다큐인, 대구대학교인권활동  
 가모임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래장  
 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마  
 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공동체연구소,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  
 레장애인야간학교, 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 ( 사 )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부산반빈곤센터, ( 사 ) 부산장애인부모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삶장애인자립생활센  
 터, 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 )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자립생  
 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적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  
 애인자립생활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  
 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세움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흥두리센터, 실로암사람들,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  
 터,안산산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심과인권나무,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  
 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 )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장애인복  
 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다울성장  
 애인학교,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  
 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천이삭센터,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천뇌병  
 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은  
 자야간학교,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  
 터너른마당, 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 장애인지역공동체, 장  
 애인푸른아우성,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  
 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사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남장  
 애인여성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현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  
 사추모사업회, 중구주민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진해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 청원장애인자  
 립생활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춘천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  
 터, 틈장애인복지재단, 평화캠프울산지부, 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 한  
 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  
 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  
 센터,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  
 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지  
 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  
 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  
 지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사 )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

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취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 ■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발언문

##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데이터 브로커 입니까”

우선, 정부가 추진 근거로 내세우는 데이터 3법 자체가 부실합니다. 2020년 통과된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유럽 연합의 GDPR(개인정보보호법), 미국의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프라이버시법)에 비해 국민들의 권리보다 기업에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재결합과 개인 식별, 이로 인한 사찰이나 서비스 차별에 대한 금지조항이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데이터 3법은 과학기술 발전의 가면을 쓴 악법중에 악법, 개인정보 도둑법입니다.

그 중 의료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더라도 정보 제공자의 명시적 동의와 완전한 익명 처리를 거쳐야 하도록 법률로 강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는 단순한 의료기록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받은 모든 진료 기록, 가족관계, 소득이 담겨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전 국민의 민감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은 기업이 전 국민을 사찰할 수 권한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하며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란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입니까?

결국 건강보험 데이터를 넘겨 정부, 공보험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기업에 팔아 치우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면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기술로 위장해 의료 민영화를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육성한다는 그 신산업이 혹시 공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우리 22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할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보당은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심심치 않게 들리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노동당 이백운 대표

노동당 대표 이백윤입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오랜 민원을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료인·공공기관이 만들고 관리해 온 공적자산이자, 민감한 건강정보가 총망라된 빅데이터를 윤석열정부는 시장에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건강보험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민간보험사들로부터 지켜왔던 그 독이 윤석열정부에 의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업에게 진료정보, 건강정보, 소득, 재산수준, 자동차 등 개인 일상의 거의 모든 자료가 넘어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국민들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거나 나도 모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개인정보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내 정보가 내가 동의하지 않은 누군가의 목적에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은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문자와 같은 기존의 피해와 불안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정보 시장개방은 공보험을 약화시키면서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을 확대하는 보험회사들의 ‘재편전략’ 그 안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보험이 중심, 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거나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의료보험체제-실비보험의 역할 확대와 같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공공적 기능을 넘겨왔던 의료민영화 흐름에 수조개에 달하는 건강보험정보 시장개방은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노동당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데이터가 돈이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느냐?”고 말하며,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험기업의 이윤추적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국민 개인정보의 합인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의 이윤을 위해 내던져져서는 안되는 공유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막아내고 OECD 최저 수준인 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의당 나순자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사무총장 나순자입니다.

무상의료 실시, 공공의료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는 정의당의 기본이자 핵심 정책입니다.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성을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앞에서도 규제혁신, 유망업종이라며 전방위적인 민영화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가 민간

기업에 넘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자본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결과로 우리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 전체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에는 나의 재산, 소득, 가족관계를 포함해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병력, 병원 검진 결과, 진료내역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남이 알아서는 안되는 정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개인정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민 건강보험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국민 전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민간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민간보험사에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넘어간다면 손쉽게 예상가능한 일은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지급 거부 등의 악용 소지입니다. 이밖에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일평생 축적된 나의 개인정보가 사용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의 개인정보를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나의 개인정보를 민간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제발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입니다.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정보들이 데이터화되고 이렇게 데이터화 된 정보들은 다양한 경제활동에 활용되고 돈벌이의 수단이 되기도됩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입니다.

너도나도 빅데이터의 활용가치에 대해 열을 올리지만, 소중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과 감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수많은 빅데이터 안에는 나조차 모르는 개인정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와 가족의 건강정보도 포함됩니다. 내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병원을 이용하고, 치료하고 약을 처방받은 모든 기록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으며, 모든 병원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적용되므로 그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공익성과 연구목적을 위해 건강데이터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증진'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민영보험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개방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처럼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

기 때문입니다.

2007년, 실손보험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던 때를 기억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비급여까지 보장되면서의 료불균형만 커졌습니다. 지금, 무려 4천만명이 가입되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의 만남으로 국민들의 가계의료비는 증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민영보험사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까지 넘기려는 겁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민의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행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성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정보가 민간에 개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에 반대하며 '공동행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대국민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홍보, 서명운동과 대정부 압박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정보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기업 제공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제공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 출범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건전재정을 앞세워 역대 정권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켰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싹짓돈처럼 써대며 의료민영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진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강행하더니 급기야 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의료정보를 데이터 산업 운운하며 민간기업에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지난 20여년간 축적된 자료로 개인의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내역 및 처방 기록, 건강검진결과 그리고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 모든 자료를 망라하고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개인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 제공의 문제가 아닌 우

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것입니다.

건보데이터 민간 제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5%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정당하고 분명합니다.

첫째,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개인 정보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공적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 공공 데이터가 사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이용되어야 합니까.

둘째, 데이터 유출 위험성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대기업에서 대규모 데이터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만일 민간 기업에 넘어간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동의없는 데이터 제공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는 공익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로 국민의 동의하에 수집된 것으로 이를 민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제공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넘긴다면 기업은 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을 하거나 보험료 지급 거부, 가입 차등화 등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귀결될것이고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사회적 행태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정당과 500여개 노동. 시민단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반국민적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제공 저지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철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단일보험자로서 자격관리나 보험급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가족관계·재산·소득 등 국민들

의 각종 개인정보를 시계열적으로 보유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빅데이터 목록에는 그 업무의 특성상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행되는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건의료 혁신 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라는 정책 기조 하에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익적·과학적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익의 극대화를 위해 탄생한 민간자본의 선의에 기대어 막연히 공익에 입각한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으며 정부 책임을 해태일 뿐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정책의 본질은 민간자본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근 주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는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는데 “왜 유독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만 제공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는 심평원 데이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보유 대표성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단일보험자로서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데이터 및 전체 의료 공급자의 의료서비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행위·의약품 등에 국한된 심평원 데이터와는 범위의 수준이 다릅니다.

**두 번째, 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 내역은 완결성이 갖춰진 정보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언제 병원이나 약국, 검진센터에 방문하여 어떻게 진료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일련의 데이터들은 개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한 정보로, 국민에게는 사생활이 공개될 우려가 높은 아주 민감한 정보들입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 데이터는 심평원 데이터와는 달리 국민 개개인의 진료 에피소드 단위로 분석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의 원인을 해명하고 인과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예측이 가능한 시계열적 정보로 정보의 활용도 측면에서 심평원의 정보와는 격이 다릅니다.

**네 번째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집된 것으로 개인의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건강검진 결과와 결합시킬 경우 정보의 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심평원 데이터와 차원이 다른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민간기업에 공개된다면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권리 침해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이 막대할 것입니다.

제작년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10곳에 685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개방했을 때 밝혀진 것처럼, 보험사의 정보 요구의 목적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 이윤의 극대화



에 있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 민간보험사들에 유리한 상품 개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산업 육성과 보험상품 개선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을 안건으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서면 의결하는 등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개방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커녕 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겠다고 공단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공적 재원으로 마련된 의료체계 인프라에 기반하여 국민과 환자·의료인·공공기관이 만들고 관리해 온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에 대책 없이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와 더불어 공공의료·공공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한국중증질환 연합회 김성주 대표

반갑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성주입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개인의 인권을 위해 여러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 개인 정보를 보호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개인 정보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것입니다. 개인의 정보는 인권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개인의 의료데이터 뿐 아니라 가족, 소득, 재산 등 개인의 민감한 사항이 고스란히 담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려고 합니다. 이는 반헌법적이자 위헌적이기까지 합니다.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민간보험사들은 연구 목적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가 연구를 한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민간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목숨과 생명을 가지고도 흥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항암 중의 치료비 지급도 거절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으로 보험 가입제한,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 대한민국 공보험을 무너뜨리고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국민의 인권과 건강권 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 추구에 편을 들고자 대한민국의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향후 우리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민간보험사 손에 넘기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넘기겠다는 이번 정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때이지 무력화 시킬 때가 아닙니다.

건강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개인 정보, 인권을 더 강화 시켜야 할 때입니다.

며칠전 청문회에서 보였듯이 정치권은 이번 빅데이터 관련 법안을 원점부터 재논의 할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 그것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제발 환자와 국민을 먼저 배려하는 대한미국의 정치를 하면 안됩니까?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를 위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